

제국은 식민지의 공간에 실증주의의 깃발을 꽂는다

심희찬*

[서평] 박준형(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아카데미, 300쪽

1. 식민사학 연구의 갈림길에서

오늘날 제국 일본의 ‘식민사학’에 관한 연구는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에 김용섭, 이기백 등이 그 폭력성을 비판한 이래로 많은 개별연구가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사학사적 관점에서 식민사학을 ‘식민주의 역사학’으로 재정의하려는 방향 전환이 시도된 바 있다.¹ 왜곡과 개찬 프레임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식민사학의 다양한 측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일본의 식민사학과 그 방대한 유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나 접근방식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식민사학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의 고안을 통해 지식 권력으로서의 근대 학술 일반에 대한 발본적인 검토까지 나아가느냐, 혹은 비판의 대상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국한하는 기존의 인식으로 회귀하느냐의 두 갈래 길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식민사학 연구에 조금이나마 발을 걸치고 있는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1 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책과함께.

서평자로서는, 그래서 최근 간행된 ‘일제 식민사학 비판 총서’가 매우 반갑다.² 총서 전체를 아직 다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집필자의 면면과 각각의 주제만 보아도 기성의 틀을 탈피하는 동시에 식민사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커다란 의욕이 느껴진다. ‘한국사’에 관한 언술이나 몇몇 개별 지식인, 혹은 특정한 사상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이번 총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시야를 확대한 점, 제국대학과 그 연구 기관은 물론 조선총독부 산하의 주요 관련 조직 및 학술단체를 망라한 점, 그리고 ‘동양사’를 중심으로 근대 이후 일본의 역사학이 내포하는 사상적 특징까지 아우르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서평자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로 약칭)와 이른바 ‘만철조사부’에 주목한 박준형의 저작,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였다. 만철이 대륙 침략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조사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이 ‘지’(知)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식민주의적 기획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활동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세노 우마쿠마(瀬野馬熊) 등은 모두 식민사학의 성립 및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만철조사부는 근대 일

2 일제 식민사학 비판 총서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태진(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천황제 파시즘』, 사회평론아카데미; 오영찬(2022),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식민지 역사의 재현과 문화계 관리』,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상우(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박준형(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영희(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준영(202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향으로서의 조선, 지향으로서의 동양』, 사회평론아카데미; 허영란(2022), 『남양과 식민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남진과 대동아공영권』, 사회평론아카데미; 이태진(2022), 『일본제국의 대외 침략과 동방학 변천: 외무성 관리 ‘동방학’에서 문부성·제국대학 ‘대동아학’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학술의 결합이라는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식민사학을 사유하게 도와주는 매우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만철이라는 기구의 특성과 중국 동북부 지역의 국제정치적 정황, 그리고 조사부 참가자의 인적 네트워크와 학술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말 그대로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를 생동감 있게 그려 낸 이 책은 추후 식민사학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다.

2. ‘통치 공간’의 창출

무엇보다 이 책의 학술서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만철조사부의 상세한 검토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식민사학에 관한 3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는 점에 있다.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는 ‘실증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전후(戰後) 조선사학’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3부 6장의 본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공간과 실증주의, 전후 조선사학이라는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식민사학을 풀어 낸다.

우선 공간에 대해 살펴보자. 어쩌서 공간인가? 우리는 모두 공간 속에 산다. 시간을 거스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공간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간도 없다. 그러므로 공간은 인간의 의식과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도서관이나 절에서는 정숙한 사람이 콘서트장이나 축제에 가면 온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우리는 건축물을 짓지만, 그 뒤로는 그것이 우리를 짓는다.” 공간은 또한 보편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 공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하며, 이때 공간은 그 소유 및 지배와 관련된 갖가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생산해 낸다.³

3 앙리 르페브르(2011),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p. 77.

즉 공간은 사회 속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상에서의 권력적 위계와 상호인식이 규정된다. 같은 최상층이라도 펜트하우스와 옥탑방의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르고, 수학여행 버스의 맨 뒷자리를 학급의 권력자인 소위 ‘노는 아이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일상 속 권력의 점유와 분할, 재편 등이 수반되며, 이데올로기에 의한 뒷받침도 요청된다. 주지하듯이 공간은 실체적 개념이라기보다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수많은 욕망이 뒤엉키고 충돌하는 유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국과 식민지도 마찬가지다. 제국은 식민지의 여러 공간을 교묘하게 재구성하고 잠식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권력을 일상성의 수준에서 현시한다. 특히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래로 일본은 조선의 공간 변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가령 1901년 10월 25일 『황성신문』에 실린 「조계지외(租界之外)」라는 짤막한 기사를 보자.

瑞山郡報를 據한 則 本郡石串里附近地에 日人 礦夫 等이 來到호야 開基設
棧호기로 本守가 詰問호되 此地는 港口租界十里外어늘 何故로 來居코자
호는노 호니 日人曰 此地段을 仁川港居 徐相集處에 買得이라 호얏더라⁴

위 기사를 통해 ‘조계십리’(租界十里)를 기준으로 개항장 부근의 공간이 구획되었고, 이를 두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제국 일본은 다양하게 분할된 조선의 공간을 점차 침식해 들어갔고, 식민지화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통치 권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 자신 조선총독부의 건축과 기사이기도 했던 이상은 1931년의 전매국 공장 낙성식에서 ‘비아와 고독’, ‘황폐한 묘지’를 체감하는 한편,⁵ 식민

4 「租界之外」, 『황성신문』, 1901년 10월 25일, 2면.

5 이상, 「얼마 안 되는 辨解(혹은 一年이라는 題目)」, 김주현 주해(2009), 『증보 정본 이상 문학전집』 3, 소명출판, pp. 152-153.

권력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가전’과 ‘사람의 시체’를 읊조리고 있었다.⁶ 공간에 대한 정치를 포함하는 제국의 통치 권력에서 이 명민한 시인은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책의 제1부 “제국 일본의 공간 확장과 ‘만한’ 지역의 공간 재편”에 실린 두 개의 글에서는 한반도와 ‘만주’를 무대로 벌어진 이러한 공간 변화의 양상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주변 각국에 대한 제국 일본의 침략은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공간 질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기존의 조공무역체제와 서구에서 유래한 주권국가 간 조약체제가 충돌하는 거대한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제국 일본은 ‘주권선’과 ‘이익선’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동아시아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동아시아 각지에는 공간을 둘러싼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특수 공간’이 발생했는데, 일본은 이러한 ‘문제 공간’들을 ‘조사 공간’과 ‘통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제국을 건설했다.

제1장 “한반도 공간의 재편과 공간 해석의 논리들”에서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의 지난 공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속국 자주’(屬國自主)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과거와 미래의 세계관이 대립하는 공간이었다. 저자는 앞서 소개한 ‘조계’를 비롯하여 ‘잡거’, ‘내지’ 등의 개념이 변화하는 모습을 각종 조약 및 그 해석, 그리고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제국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공간 잠식의 측면에서 그려 낸다. 공간의 변용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거류민단법’(1905년), ‘토지가옥증명규칙’(1906년) 등을 통해 “치의 법권을 향유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무제한적인 내지 잡거가 이루어지는” “치의법권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의 선례를 한반도에서 만들어 냈다(p. 68).

6 김대웅(2021), 「이상 시 「과첩(破帖)」과 식민지 도시계획의 공간 정치」, 『현대문화이론연구』 87, pp. 145-148.

한반도의 공간 재편은 이윽고 ‘만주’ 지역의 공간 재편으로 이어졌다. 제2장 “‘만주’ 공간의 재편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공간 경영”은 조선과 청나라의 오랜 경계 문제에 제국 일본의 권력이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제국 일본은 러일전쟁 종결 직후부터 간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고, 권력과 학술의 결합을 통해 얻어 낸 논리들을 무기로 삼아 청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다. ‘문제 공간’은 이처럼 한반도에서 간도로 확대되었고 이윽고 만주도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하나로 만철이 설립되었다. 만철은 러시아와 청국의 조약에 입각한 ‘동청철도’(東淸鐵道)의 권익을 계승했지만, “일본 정부는 만철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았으며, “철도부속지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마치 ‘치외법권’적 공간처럼 변환시켰다(pp. 99-100). 이러한 공간의 변용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들은 다시 민족별·계급별로 분할된 공간 속에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1932년 만주국 건국을 통해 해당 지역이 ‘통치 공간’으로 포섭되자 철도부속지의 치외법권적 권익 역시 소멸했다. 저자가 논하듯이 이는 조계라는 ‘문제 공간’을 1914년 부제(府制) 실시를 통해 ‘통치 공간’으로 전환했던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통치의 예외성을 담보하는 그와 같은 공간들은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했다(p. 103).

3. 실증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그런데 기존의 공간에 다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여 이를 새롭게 제도화하는 제국 권력의 원천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피식민자의 일상과 삶을 지배하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치의 기술(techne)을 고안하고 발명해 내는 힘, 즉 지식 권력의 뒷받침이 필요하

다. 이때 근대역사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새로운 ‘통치 공간’이 될 지역이 과거에 걸어진 길을 밝혀냄으로써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영속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분해하고 배치하며 또 도식화하고 색인화하여 기록해서 그 대상을 알게” 하는 역사학적 실천은 그러한 행위 주체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시킨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행위 주체의 지적 우위를 방증함으로써 “식민지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효과를 낳는다.⁷ 저자가 만철조사부의 연구에 머물지 않고, 일본의 동양사학 및 그 토대를 이루는 실증주의까지 검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2부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의 설립과 ‘동양사학’의 전개”에서 저자는 이러한 실증주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제3장 “만철의 조사기구와 사람들: ‘동양사학’의 기원”에서는 식민지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초대 총재로서 자신의 지론을 만철에 이식하는 과정 및 만철 내 각종 조사기관의 계보를 설명한다. ‘문장적 무비’(文裝的武備)(p. 111)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토는 학술과 실제의 겸비를 강조했는데,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그와 같은 고토의 이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기관이었다. 그 중심인물이자 일본 동양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학술연구에 입각한 ‘만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으며, 이나바 이와키치 역시 ‘만한일통(滿韓一統)의 경영’을 주장했다(pp. 129-130).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훗날 조선의 역사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과의 관련성을 부각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만선사’(滿鮮史)를 제창하기에 이른다.

이들 식민사학자는 실증적 연구보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제국대학 등

7 이성시(1999),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p. 261.

지에서 근대 일본의 역사학을 특징 짓는 실증주의의 세례를 누구보다 깊게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많은 식민사학 연구는 그들이 실증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왜곡과 개찬의 프레임을 조선사 연구에 적용했다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 반실증주의적인 측면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때 정작 실증주의는 논의의 바깥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도 그 기반을 이루는 실증주의는 “최종적으로는 면죄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p. 29).

저자는 이러한 기존의 식민사학 연구를 극복하고 “연구자를 ‘실증주의’의 피난처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작업”을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내건다(p. 29). 식민사학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를 실증주의에 설정한다는 담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실증은 그 어떤 역사학자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정언명령이자,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밭을 딛고 있는 대지라고 할 수 있다. 실증을 부정하는 역사학자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실증주의자가 아닌가? 서평자 역시 그간 식민사학 연구는 반드시 실증주의 담론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저자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했으며 든든한 느낌까지 받았다.

그런데 실증주의 비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과거의 자료를 다루는 역사학자는 실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공교롭게도 실증주의 비판 역시 실증적으로 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저자는 헤이든 화이트의 『메타히스토리』를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제기한다.

실증주의는 역사학 고유의 방법론으로 본래부터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역사서술이 실증주의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실증주의인가를 묻고 또 그 안에서의 계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p. 144)

이러한 전략을 ‘실증주의의 복수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단수 개념으로서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의 여러 다양한 지점, 즉 ‘실증주의의 스펙트럼’(p. 152)으로 문제설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식민사학 연구 역시 그 실증이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 기성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제4장 “‘동양사학’의 계보와 ‘실증주의’: 이케우치 히로시의 ‘만선사’를 중심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례 연구다. 저자는 랑케의 실증주의가 리스를 통해 근대 일본에 도입되고, 그 이념이 다시 시라토리의 ‘남북이원론’으로 전유되어 이케우치로 이어지는 계보를 추적한다. 이케우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가 시라토리 실증주의의 주요한 두 축인 ‘만한 경영에 관한 실제적 필요’와 ‘순연한 학술적 견지’ 가운데 후자를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케우치는 현실의 정치적 필요성을 중시한 이나바와 달리 “‘한족(韓族)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그 영역을 북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p. 157). 그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고, 패전 이후에는 황국사관(皇國史觀) 및 군국주의의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저자는 이케우치 역사학의 이러한 특성을 ‘합리주의’에서 찾는다. 이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 만약 그것이 합당한 자료들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그 가설은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적 사고법이었다.”(p. 160) 시라토리의 실증주의가 이케우치에 이르러 합리주의적 논리학으로 변화한 것인데, 당연히 역사 연구에서는 논리학과 상충하는 부분이 돌출할 수밖에 없다. 이케우치의 제자였으며 만철조사부에서도 근무했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논리학적 사고법에 의문을 가졌다. 한때 맑스주의에 심취하기도 했던 그는 마치 논리학과도 같은 학문의 순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라토리, 이케우치, 하타다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실증주의는 “다양한 역사방법론과 결합해왔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했다(p. 167).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식민사학을 다시 읽자고 주장한다.

4. 식민사학, 그 후

제3부 “만철조사부의 변천과 ‘현지조사’의 확대”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제국 일본의 동양사학과 실증주의의 자장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맑스주의를 받아들였던 하타다 다카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하타다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연구가 가진 의의 및 역사 인식의 깊은 부분까지 파고든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제5장 “제국 판도의 팽창과 ‘조사 공간’의 확대: ‘만몽’에서 ‘화북’으로”에서 저자는 만철 내부의 변화, 그리고 하타다도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참가했던 ‘중국농촌 관행조사’를 둘러싼 인적·사상적 배경을 정리하면서 이를 ‘동상이몽’으로 표현한다. 전쟁 말기 만철조사부와 중국의 공동체에 투영된 지식인들의 여러 꿈과 욕망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젊은 연구자 하타다는 “연구 내용이 연구자의 시점이나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p. 205). 이후 “일본인의 중국 연구·아시아 연구는 일본인의 사상 형성의 일환이다. 그를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 연구의 심화에 기여할 것”(p. 205)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하타다는, 조선 민족을 주인공으로 삼는 역사서술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로의 복귀”를 기도한다(p. 166).

그 대표적인 예로 1951년 간행된 하타다의 유명한 저작 『조선사』를 들 수 있다. 하타다는 이 책에서 조선사를 ‘외국의 역사’로 정의하면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깊은 골을 설정”한다(p. 213). 그래야만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같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이 잠식했던 식민지의 공간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과거 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을 배웠으며 만철조사부에도 가담했던 하타다 역시 제국의 식민지 공간 잠식이라는 폭력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처지는 아니었다. “‘조선 민족’이라는 타자와의 대면 가능성”(p. 223)을 추구했던 하타다가 그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학자로서 고뇌하는 모습이 제6장 “제국의 붕괴와 ‘현지조사’의 유산: 하타다 다카시의 ‘전후 조선사학’을 중심으

로”에서 그려진다. 이러한 하타다의 고뇌는 가령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조선사학 제1강좌를 담당했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패전 이후 과거 자신이 참가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을 떠올리며 행한 다음 발언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그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조선과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이 도외시되었는지, 100년 후의 역사가가 바른 해석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 (중략) 적어도 조선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은 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념비의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다.⁸

하타다는 순수한 학술연구를 지배 이데올로기와 분리하려는 연구자들의 발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구자에게 내재된 인식의 ‘뒤틀림’을 극복하고, 대상에게 친근감과 애뜻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종종 역설했다. 하지만 이미 식민지의 공간에 이중 삼중으로 둘러쳐진 권력의 분할선 안에서 제국의 연구자가 피식민자에게 인간적인 공감을 가지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에 불과했다. 순수한 학문에 안주할 수도, 그렇다고 안이하게 연대감을 내세울 수도 없는 구제국 출신의 역사학자 하타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진다. 끊임없는 ‘반성’ 속에서 하타다는 “현실을 주시하면서 사상과 학문을 통일”한다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을 택한다(p. 251). 저자는 이를 순수학문이라는 일종의 이데아의 세계와 대비되는 ‘공감 가능성’, 혹은 ‘역사가의 신체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역사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반성을 촉구한다(pp. 261-263).

8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黒板勝美博士記念會 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 吉川弘文館, 1953, pp. 325-327.

5. 나가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공간, 실증주의, 전후 조선사학이라는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식민사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다양한 문제들을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저자의 깊은 혜안과 날카로운 지적에 서평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실증주의의 스펙트럼’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한편으로 ‘실증주의 일반’이 지닌 문제점을 희석하고, ‘일본의 실증주의’가 보여 주는 특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근대를 지배한 과학 담론과 그에 연계된 실증주의 일반이 가진 고유한 문제영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만 오늘날 우리의 역사학까지 시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명 일본의 전후 조선사학을 상징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역사학적 저술보다 선언적이고 감상적인 글을 더욱 많이 남긴 하타다를 저항하는 역사가의 대표적 존재로 계속 바라보아도 되는지 의문도 들었다.

그렇지만 서평자의 이런 작은 불평이 이 책이 지닌 연구서로서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제국은 식민지의 공간에 실증주의라는 이름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통치 권력을 드러낸다. 역사학 연구자는 자신이 하는 작업 또한 이러한 의혹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평자 역시 이 책에서 배운 바를 토대로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반성’의 길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황성신문』, 1901년 10월 25일.

김대웅(2021), 「이상 시 「파첩(破帖)」과 식민지 도시계획의 공간 정치」, 『현대문학이론 연구』 87.

- 김주현 주해(2009), 『증보 정보 이상문학전집』 3, 소명출판.
- 르페브르, 앙리(2011),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박준형(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아카데미.
- 서영희(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 오영찬(2022),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식민지 역사의 재현과 문화재 관리』, 사회평론아카데미.
- 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책과함께.
- 이성시(1999),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pp. 243-262.
- 이태진(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천황제 파시즘』,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태진(2022), 『일본제국의 대외 침략과 동방학 변천: 외무성 관리 ‘동방학’에서 문부성·제국대학 ‘대동아학’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상우(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준영(202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양으로서의 조선, 지향으로서의 동양』, 사회평론아카데미.
- 허영란(2022), 『남양과 식민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남진과 대동아공영권』, 사회평론아카데미.

